

# 민주, 李 소환 앞두고 尹 정부 맹공

## “尹, 허위사실공표 혐의 자유롭지 않아” “수사 지체, 봐주기식”...특검 추진 시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 추진을 시사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맹공에 나섰다. 이재명 당 대표가 통보받은 검찰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모씨가 임의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력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돼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당국이 계속해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오늘 의총에서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 김 여사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허위 경력 거짓 해명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 기사가 나왔다”고 질었다.

또 “회견에서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느냐”라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공동 정부란 얘기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을 짚으면서 과거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끝나고 나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실 그때 내가 잘 몰랐다고 고백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김 여사에 대한 처벌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피력했다.

먼저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기 때문”이라며 “합정을 만들어 놓고 문 열고 들어오란 것에 결코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재명 검찰 출석에 반대한다”며 “국감이나 방송에 공개된 자료인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서면 조사에 충실히 이미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으나 싫을 정도”라며 “어쩌면 김건희 사건,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불릴지 모르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까 바란다”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이외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용산 출석 이전에 따른 혈세 낭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이명박 보석, 박근혜 사면, 문재인 퇴임 등으로 인한 경호 대상자 증가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이미 이 전 대통령 보석을 근거로 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조차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명박 사면 다각도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무능한 거짓 해명을 한 건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 與, 이르면 내일 새 비대위원장 발표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7일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올해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8일)에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새 비대위원장을 언제 발표할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목요일 늦게 또는 금요일에 발표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추가 답변을 통해 날짜를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오는 8일 새 비대위원장을 확정하는 전국위가 계획된 만큼 권 원내대표는 그 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음 날인 9일부터는 추석 연휴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치분 신청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임명될 수 있다는 말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주 위원장이 임명한 기존 비대위원회의 사퇴 여부에 대해선 “그건 제 권한이 아니다. 비대

위원장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새로운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선 “새로 선임된 비대위원장 전권이라 원내대표인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위원회,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

전국위에서 의결되는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권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현재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을 의결한다.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내 대안 부재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효력정지 가치분 인용으로 윤신의 폭이 좁아진 주 위원장의 재임명을 발표하면 또다시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한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나. 가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에 비대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지난 2일 전국위 개최 금지가 처분을 제출했다.

김재환기자

# 이재명 “대선 때도 화천대유 특검 필요하다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 가능성에 대해 “화천대유 문제는 대선 때도 계속 특검

쌍특검 질의에 과거 제안 상기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요구에 대해 그가 당시 특검 제안을 했던 걸 상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쌍특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특검 가능

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도 예고한 상태이다.

이 대표가 본인 관련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전면전 기조를 보여준다는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물귀신 작전”, “시간끌기”, “기만술”이라는 등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른바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에 대해선 “계속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내에선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서선욱기자

# 한동훈 “촉법소년 하향, 건설적으로 답낼 때 돼...70여년동안 유지돼 온 것”

## 좀 더 현실적인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 준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의) 맹점을 약용하려는 사람이나 불만을 느낀 국민과 관련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은 70여년간 그대

로 유지돼 온 것”이라며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 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도 촉법소년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며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